

##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구상을 위한 금융외교 전개 배경과 한국의 대응 전략

정석환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석사과정)

### I. 연구배경

### II. 브레튼 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와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질서 성립

### III.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

1. 브레튼 우즈 체제의 구조적 한계
2. 변동환율체제로의 이행과 2008년 미국발(發) 세계금융위기
3.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의 부상
  - (1) 중국의 경제적 굴기(崛起): 조어도 사태와 대(對) 일본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
  - (2) IMF와 세계은행그룹의 지분 개혁 문제
4.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중국에 미친 영향

### IV.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정치경제적 함의

1. '실크로드 경제지대'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2. 위안화의 국제화와 다자개발은행의 설립

### V. 한국의 대응전략

1. AIIB의 지배구조 문제
2. AIIB와 ADB에서의 지분 확대 문제와 본부 유치 노력

### VI. 맺음말

## 요약

2008년에 발생한 미국발(發) 금융위기를 통하여 중국은 대외적으로 경제적 위상을 제고함과 동시에 미국이 주도하는 현 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국제금융질서를 구축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경제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미국이 3차에 걸쳐 양적완화 정책을 전개하면서 중국의 통화정책이 미국에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와 동시에 약 4조 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고의 분산배치 방안을 모색해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시진핑 주석은 2013년 9월 중앙아시아 순방 과정에서 '실크로드 경제지대'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라는 양대 개념을 골자로 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을 발표하였다. '실크로드 경제지대'는 낙후된 중국 중서부지역의 개발을 통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을 도모하면서 경제정책 방면에서 내치(內治)와 외치(外治)의 통일성을 추구하고, 해로(海路)를 기반으로 한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통하여 중국의 남부지방과 동남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경제적 구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브레튼 우즈 체제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이 설립되면서 1944년 이후의 국제금융질서는 미국과 서유럽, 그리고 일본에 의해 주도되어왔다. 하지만 2008년 경제위기를 통해 신흥국들의 경제적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국제기구의 지분구조에 대한 개혁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결국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은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 개혁방안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지배구조의 변화는 각국의 보유지분이 의결권으로 직결되는 국제기구의 세력구도에 변화를 가져오고, 그에 따라 국제관리체제(global governance)에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었다. 특히 다국간 협력사업은 지금까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이루어져왔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지분 확대를 통해 중국이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서 갖는 국제정치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경제적 위상을 점차 확보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 이후에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서유럽 국가들의 지분 비중을 낮추고 신흥국의 의결권을 확대하는 방향의 개혁안은 많은 반발에 부딪혀 결국 실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상하이 협력기구 개발은행(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Development Bank) 등의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을 설립하여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질서를 구축함으로써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01년을 기점으로 세계질서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한국 또한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경제적 성장을 거듭해온 것과 달리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내세우며 막대한 전쟁비용을 지불하면서 국가 재정에 타격을 받았고, 이는 곧 경제적 단극이라는 패권국가로서 미국이 가진 위상의 점진적인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중국은 한국에 신흥 경제동맹국으로 부상하였고, 미국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외교·안보동맹으로서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구(舊)질서와 신(新)체제의 등장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전략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은 자칫 양자간의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은 중간자로서의 위치를 활용하면서 협상력을 강화하여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적 균형(arbitrary balancing act)의 전략이 필요하다.

## I. 연구배경

제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약 60여 년 동안 이어져왔던 국제금융질서는 2008년에 발생한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에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기존 미국 중심의 국제금융질서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상하이 협력기구 개발은행(SCO 개발은행), 신개발은행(NDB)등과 같은 자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를 설립하면서 활발하게 금융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개혁개방과 세계 자유무역질서로의 편입을 통해 축적해왔던 약 4조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외교자원으로 활용하게 된 것이다.

이 중에서 특히 AIIB의 경우 한국의 가입 여부를 두고 미국과 중국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라지고 있다. AIIB와 같은 다자개발은행의 설립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ADB와 세계은행그룹과 유사하게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개발 산업 지원을 그 설립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과 그 동맹국 일본은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국제경제·금융 질서를 현실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이 AIIB를 설립하면서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는 판단 하에 한국의 AIIB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sup>1)2)</sup>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에서 정치·외교·안보 분야와 함께 금융 부문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아시아 회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자국 영향력 감소를 우려하는 것이다.<sup>3)</sup> 반대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14년 11월 10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AIIB에 관해 “기존에 있는 다자국제금융기구에 더해 보완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공식적으로 한국의 AIIB 가입을 요청하였다.<sup>4)</sup>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의 반대와 AIIB의 지배구조 문제를 이유로 가입을 유보한 채 실무진 차원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부터 2008년 세계 금융 위기까지의 국제금융질서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에 나서게 된 배경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에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왔던 구(舊)질서와 중국 중심의 신(新)체제 등장이라는 국제정치·경제적 전환기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 II. 브레튼 우즈 체제와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질서 성립

1944년 7월 미국에서 열린 UN(United Nations) 금융·재정 회의에는 44개의 제 2차 세계대전 동맹국들이 참여하여 ‘브레튼 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의 성립에 합의하였다. 이 국제통화체제는 국제무역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1930년대 대공황기 이래 계속되어 온 각국의 화폐가치 평가절하 경쟁을 막고 외환관리를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45년에 환율과 국제 수지 등 국제금융체제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기구로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이, 그리고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각국의 경제 부흥과 저

- 
- 1) 이태규. (2014년 7월 8일). “백악관 보좌관 “한국 AIIB 가입 신중해야.”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71fd76222446465ab1b2732c4eed79fd>에서 검색됨
  - 2) 미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에도, 지역 내에서 경제 질서를 주도하기 위하여 일본이 아시아판 IMF인 아시아 통화기금(AMF)을 설립하려 하자 이를 반대하여 무산시킨 바 있다.
  - 3) 서정명. (2014년 7월 4일). “중국 주도 AIIB 가입, 한국 깊어진 딜레마.” 서울경제: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407/e2014070423293993130.htm>에서 검색됨
  - 4) 석진환. (2014년 11월 10일). “박 대통령 “FTA 타결 큰 성과”...시진핑, AIIB에 한국 참여 요청.”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663870.html>에서 검색됨

성장국(least developed countries)의 개발을 위하여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이 창설되고, 금본위제를 기반으로 한 고정환율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렇게 창설된 국제금융기구에서 미국은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IMF의 의사결정은 투표로 이루어지는데, 투표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크기(voting power)는 각 회원국의 지분 비율에 비례한다. 안건이 통과되려면 사안에 따라 70% 또는 85%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70%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사안은 주로 금융과 운영상의 문제로서, IMF가 회원국에 제공하는 대출과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SDR)<sup>5)</sup>의 금리 결정과 같은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새로운 회원국의 가입과 지분 및 특별인출권의 분배, 그리고 IMF 협정의 개정과 같이 중요도가 매우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8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sup>6)</sup> 그런데 미국이 IMF 회원국 내에서 최대의 지분율인 16.75%를 보유함으로써, 사실상 중요한 사안의 해결과 지분구조의 개혁을 위해서는 미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지배구조를 가지게 되었다.<sup>7)</sup> 이는 IMF의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지분율을 배정하는 세계은행그룹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두 차례에 걸친 개혁안이 시행되더라도 미국의 지분율은 15% 이하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독자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sup>8)</sup>

이 당시 각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질서에 합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의 주요 산업 인프라가 파괴되어 경제 재건이 시급했던 반면에, 미국은 자본주의 진영이 보유하고 있는 금의 약 70%,<sup>9)10)</sup> 그리고 세계 경제의 총생산(세계 GDP)에 약 50%의 기여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sup>11)</sup>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당시 회의에서는 미국의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달러화의 가치를 금에 고정시키고, 다른 통화의 가치는 달러화에 연동시킴으로써<sup>12)</sup> 간접적으로 금에 고정되는 금본위제를 시행한다는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중앙은행의 보유금을 달러나 금으로 보유할 수 있었으며, 미국 중앙은행에서 달러와 금을 상시 교환할 수 있었다.<sup>13)</sup> 이러한 국제금융질서의 성립 과정에서 IMF는 가맹국들로 하여금 화폐의 평가가치를 고정시키고 이를 달러나 금으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금과 함께 달러화를 국제 통화로 인정하는 국제금융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고정환율제도의 시행을 통해 미국은 기축통화(key currency)화 된 달러화와 다른 통화 사이에 일정 수준의 환율을 유지함으로써 각국의 환율을 안정화시키고, 이를 통해 전후 국제금융질서를 미국

5) IMF 회원국의 국제수지가 악화되었을 경우, 별도의 담보 없이 지분 비율에 비례하여 배정받은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통화를 말한다.

6) Weiss, M. A. (201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7) "IMF Member's Quotas and Voting Power, and IMF Board of Governors." (2014년 12월 7일).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ttp://www.imf.org/external/np/sec/memdir/members.aspx>에서 검색됨

8) Development Committee Meeting. (2010). *World Bank Group Voice Reform*.

9) Katasonov VY. (2014년 5월 29일). "The Soviet Union could become a "co-founder" of the Bretton Woods system." RU facts: <http://ru-facts.com/news/view/35814.html>에서 검색됨

10) "Money Matters: An IMF Exhibit -- The Importance of Global Cooperation". (2014년 11월 29일).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https://www.imf.org/external/np/exr/center/mm/eng/mm\\_dr\\_01.htm](https://www.imf.org/external/np/exr/center/mm/eng/mm_dr_01.htm)에서 검색됨

11) Lundestad, G. (2012). *"When Will China Overtake the United States in Great Power Terms?"*. Bologna: Johns Hopkins University.

12) 교환 비율은 금 1온스당 35달러였으며, 기타 화폐의 달러화에 대한 환율 변동폭은 1% 이내로 억제하도록 하였다.

13) 이처럼 중앙은행에만 금 태환의 권한이 주어진 것 또한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의 요구사항이었다. Coggan Philip. (2012). "Paper Promises." Public Affairs 참조.

이 주도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sup>14)</sup>

### III.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와 2008년 미국발(發) 금융위기

#### 1. 브레튼 우즈 체제의 구조적 한계

하지만 이러한 브레튼 우즈 체제는 시작 단계부터 제도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달러화의 세계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미국은 지속적으로 무역수지의 적자 상태를 유지해야만 했다. 그런데 1960년대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수행하면서 재정지출의 규모가 확대되었고, 이는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고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미국의 국제수지적자가 이처럼 누적되면서 달러의 신인도와 가치가 하락하였다.

베트남 전쟁과 함께 1960년대부터 확대된 세계 경제 또한 달러화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무역 규모가 확대되기 위해서 거래수단의 기능을 하는 달러화의 공급이 이어져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점차 확대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달러화의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반대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러화의 공급 규모를 줄였을 경우 세계 무역 규모는 축소되지만 미국의 국제수지는 개선된다.<sup>15)</sup> 이와 같은 모순적인 상황이 약 50여 년간 이어져왔다.

대미(對美)무역수지 흑자국은 국제 시장과 자국 내 지속적인 달러의 공급으로 자국 화폐가치에 대한 평가 절상 압력을 받게 된다. 이에 환율을 안정을 위하여 중앙은행은 달러를 사들이게 되고,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증가하며 민간 부문에 통화량이 과잉 공급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겪게 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통화량을 흡수할 경우 경기 침체가 일어날 우려가 존재한다. 결국 화폐의 유동 속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과잉공급된 달러화가 각국의 외환보유고로 편입되면서 오히려 화폐의 유통속도가 저하되는 세계 경제의 비효율성이 모순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달러의 신인도 하락이 이어지면서 상대적 안전 자산인 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국들은 달러와 금의 교환을 요구하기에 이르러 금태환성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당시 미국의 금 보유량은 대미(對美)무역 흑자국이 보유한 달러액의 1/4에 불과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각국의 외환보유고 구성과 국제금융체제에 혼란을 야기하였다. 결국 국제통화로서의 달러화가 파국에 치닫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와 함께, 달러화의 가치를 방어하여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닉슨 정부의 신경제정책으로 인하여 고정환율제로서의 브레튼 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sup>16)</sup>

#### 2. 변동환율체제로의 이행과 2008년 미국발(發) 세계금융위기

14) 이영기. (2013). “국제금융제도 변천과 한국의 대응.” 동국대학교.

15) 이처럼 미국의 국제수지와 기축통화의 역할이 모순되는 상황을 트리핀의 딜레마(Triffin's dilemma)라고 한다.

16) 고정환율제로서의 브레튼 우즈 체제는 붕괴되었지만 이로 인해 설립된 국제금융기관인 IMF와 세계은행그룹은 여전히 건재하다. 게다가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설립된 전 세계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의 연합체인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는 금융 산업의 규제방향을 주도함으로써 1980년대 말 이후 주요 국제기구로 급부상 하였는데, BIS의 논의는 금융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에 의해 주도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여전히 미국 중심의 국제금융질서로서의 브레튼 우즈 체제는 지속되고 있다는 견해 또한 존재한다.

1971년 8월 15일 닉슨 선언(Nixon Doctrine)으로 미국은 이른바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을 시행하며 달러의 금태환 정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이는 곧 세계경제가 변동환율체제와 달러본위제를 기반으로 운영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달러본위제를 통해 미국은 국제수지의 적자폭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불황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만약 미국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국내에 과잉 유동성을 공급했을 경우에도, 단기 자본을 통해 국제 통화 시장으로 해당 과잉 달러를 유통시키고 이렇게 과잉된 국제유동성은 환투기자금 및 금리 차익을 목적으로 환율 절상 예상국이나 금리 인상 예상국에 유입시킴으로써 미국 국내의 과잉 유동성을 국제적인 과잉 유동성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sup>17)</sup>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미국은 국제 유동성을 무한히 공급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달러화 발권력을 기반으로 일방적인 재정정책을 전개할 수 있었다.<sup>18)</sup>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이어짐에 따라 달러가치가 하락하면서 미국은 국제수지 흑자국에 화폐가치의 평가절상을 요구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소련과의 냉전으로 인하여 국방비 지출까지 늘어나면서 정부 부채 또한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미국은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하여 화폐 부문을 성장시키게 되었다. 다양한 파생상품이 개발되면서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의 괴리가 일어나게 되고, 팽창된 자본이 부동산과 금융시장으로 유입되어 점차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경제에 거품이 일어나게 되었다. 금 보유량의 부족과 누적된 쌍둥이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동산 담보 대출을 통한 유동성 확대라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화폐가치가 떨어질 것이라 예상되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대출 규모를 증가시켜 무리한 부동산 투자에 나서게 되고, 금융기관은 신용 등급이 낮아 대출 부적격 대상이었던 금융 소비자들에게까지 대출을 제공하였다. 이후 국제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강해졌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2004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였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금융기관이 연쇄적으로 위기를 겪게 되었다. 금리가 상승하고 신용경색이 일어나면서 투자와 소비심리가 위축되었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어 성장률이 하락하고 실업이 급증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금융위기는 변동환율체제를 기반으로 세계화된 금융 체제를 통하여 각국으로 전이되어 미국발(發) 세계금융위기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sup>19)</sup>

### 3.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의 부상

금융위기 발생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유동성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flight to safety)<sup>20)</sup> 심리에 의하여 신흥국으로부터 투자자금을 빠르게 회수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러시아, 브라질, 홍콩, 인도 등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 상대적으로 활발했던 국가들의 경우 더욱 크게 나타났는데, 이들 국가로부터 회수된 투자금액은 150억 달러에 이른다.<sup>21)</sup>

하지만 국제금융위기에 대항하여 각국이 적극적인 정책공조<sup>22)</sup>에 나서면서 선진국의 경제회복

17) 이렇게 과잉공급된 국제유동성은 미국계 다국적 기업의 활동 자금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18) 이에 따라 브레튼 우즈 체제의 성립 당시 금 1온스당 35달러였던 달러화의 교환가치가, 2014년 12월 현재는 1온스당 약 1,200달러로 화폐가치가 현저히 하락하였다.

19) 주명건. (2014, 4). *붕괴된 브레튼우즈체제와 그 개혁방안*. Retrieved from 월간조선: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B&nNewsNumb=201404100059>

20) 이러한 현상은 주로 선진국 국채와 미 달러화, 그리고 금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로 나타난다.

21) 그림 1 참고.

22)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는 금융기관의 자본을 확충하고 채무를 정부가 직접 보증함과 동시에 부실자산의 매입을 통해 무제한에 가까운 유동성을



〈표〉 해외 뮤추얼펀드 유출입 현황

(단위 : 십억 달러)

구 분	'08년	'09년 상반기	4월	5월	6월
Global Emerging Market Funds	-9.5	14.2	2.9	4.3	2.1
Asia Ex-Japan Funds	-19.5	11.5	3.3	5.1	3.2
Latin America Funds	-5.9	5.2	1.1	1.9	0.9
Europe/Middle East/Africa funds	-5.2	-0.7	-0.01	0.4	0.3

자료 : EPFR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가 선진국보다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던 원인은 경기에 민감한 수출 위주의 전략에서 자체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선회하였기 때문이다.<sup>26)</sup> 이처럼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의 내수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그 경제적 위상이 제고되었다.<sup>27)</sup> 이는 당시까지 미국이 위기 극복을 선도했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이러한 경제 회복의 과정에서 중국은 재정 지출의 확대와 지속적인 무역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 세계의 對중국 수출의존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중국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기존 선진국의 경제적 위상은 많이 하락하게 되었다.

〈수출 및 내수의 성장기여도〉

	경제성장률 평균	경제성장 기여도			순수출의 성장기여율	GDP 대비 순수출 비중 (2009)
		소비	투자	순수출		
중국	10.2	4.1	5.0	1.1	10.8	4.2
인도네시아	5.2	3.1	1.4	0.4	7.7	0.3
말레이시아	5.1	4.6	0.4	0.1	2.0	17.7
태국	4.8	2.7	1.5	0.5	10.4	6.4
독일	1.4	0.5	0.1	0.9	64.3	4.2
일본	1.5	1.0	0.2	0.5	33.3	0.1
미국	2.3	2.3	0.1	△0.1	△4.3	△3.8

자료 : 피터슨 연구소, '00-'08년간 수출 및 내수의 성장기여도

(1) 중국의 경제적 굴기(崛起): 조어도 사태와 대(對) 일본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

이처럼 신흥국의 경제적 부상이 국제정치적 영향력으로서의 확대로 이어진 사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2010년에 발생한 중국-일본간의 영토 분쟁 문제이다. 현재 일본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조어도 지역에서 일본 정부의 중국 어선 나포를 계기로 갈등이 일어났다. 2010년 상반기

26) 대외경제국. (2010년). 신흥국 시장 부상에 따른 경제적 평가 및 시사점. 기획재정부.

27) 표 <수출 및 내수의 성장기여도> 참고.

기에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올라선 중국은 여론을 통한 압박과 함께 희토류의 대일(對日)수출 제한조치를 통하여 일본 정부를 압박하였고, 이에 일본 정부는 나포된 어선을 석방하면서 사실상의 '항복'을 받아들였다. 기술력과 자본력을 앞세워 중국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일본과, 세계금융위기 이후 경제 성장을 이끌며 G2의 반열에 올라선 중국 간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은 사건이었다. 이 사건 이전까지 세계 제 2차 대전의 승전국이자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은 국제정치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지만, IMF, ADB, 세계은행 등의 국제금융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던 일본에 비해서는 국제경제적 위상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희토류 수출 제한이라는 사실상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 제한이라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외교전에서 승리하면서 동북아시아 세력 균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내었다. 일본의 대(對)중국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면서 중국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대외적인 정치적 영향력과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본격적으로 얻게 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sup>28)</sup>

(2) IMF와 세계은행그룹의 지분 개혁 문제

〈세계은행그룹의 지분구조와 그 개혁안〉

G7/유럽	기존	2008 1단계 개혁안	2010 2단계 개혁안	신흥개도국	기존	2008 1단계 개혁안	2010 2단계 개혁안
미국	16.36	15.85	15.85	중국	2.78	2.77	4.42
일본	7.85	7.62	6.84	사우디아라비아	2.78	2.77	2.77
독일	4.48	4.35	4.00	러시아	2.78	2.77	2.77
프랑스	4.30	4.17	3.75	인도	2.78	2.77	2.91
영국	4.30	4.17	3.75	브라질	2.07	2.06	2.24
이탈리아	2.78	2.71	2.64	멕시코	1.18	1.17	1.68
캐나다	2.78	2.71	2.43	대한민국	0.99	0.99	1.57
네덜란드	2.21	2.15	1.92	베네수엘라	1.27	1.27	1.11
벨기에	1.80	1.76	1.57	아르헨티나	1.12	1.12	1.12
스페인	1.74	1.70	1.85	인도네시아	0.94	0.94	0.98

세계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의 경제적 위상이 제고되면서 기존의 미국과 일본, 그리고 서유럽 국가들의 모임인 G7<sup>29)</sup>에 의해 주도되었던 정상회의가 신흥국을 포함한 G20으로 확대되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신흥국의 지분, 즉 발언권(voting power)을 확대하는 IMF의 지배구조 개혁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다.<sup>30)</sup>

28)인교준 흥제성. (2010. 9 27). *우뚝 선 중국.. 東亞 판도변화*. Retrieved from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0/09/27/0301000000AKR20100927096600083.HTML>

29)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G5에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참여하며 G7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러시아가 합류하면서 G8으로 불리게 된다.

30) 표 <IMF 국가별 지분 어떻게 바뀌나> 참고

### IMF 국가별 지분 어떻게 바뀌나 (단위=%)

순 위	국 가	지분을	기존 지분을
1	미 국	17.41	17.67
2	일 본	6.46	6.56
3	중 국	6.39	4.00
4	독 일	5.59	6.11
5	영 국	4.23	4.51
6	프랑스	4.23	4.51
7	이탈리아	3.16	3.31
8	인 도	2.75	2.44
9	러시아	2.71	2.49
10	브라질	2.32	1.78
11	캐나다	2.31	2.67
12	사우디	2.1	2.93
13	스페인	2	1.69
14	멕시코	1.87	1.52
15	네덜란드	1.83	2.17
16	한 국	1.8	1.41
17	호 주	1.38	1.36
18	벨기에	1.35	1.93
19	스위스	1.21	1.45
20	터 키	0.98	20위 진입

※ 상위 20위 기준. 자료=IMF

이는 신흥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의 변화를 국제기구의 지배구조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의한 것이었다. 특히 이 개혁안에 따르면 중국의 지분율이 4%에서 6.39%로 확대되면서, 지분 순위가 6위에서 3위로 상승하게 된다. IMF의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세계은행그룹의 지배구조 또한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데, 중국의 지분율은 2.77%에서 4.42%로 확대되어 역시 3위로 올라서게 된다.<sup>31)</sup>

하지만 앞서 서술된 바와 같이 IMF와 세계은행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지배구조 개혁안과 함께 논의된 국제기구의 재정 확충 방안에 따라 '미국이 부담하는 공여금은 늘어나고 영향력은 줄어드는' 것에 대하여 미국 공화당원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개혁안은 현재 미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조건으로 점진적인 위안화 절상을 이뤄왔던 중국으로서는<sup>32)</sup> 기존의 국제금융질서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를 설립한다는 전략적 판단에 이르게 된다.

31) 표 <세계은행그룹의 지분구조와 그 개혁안> 참고

32) 김현수 이상훈. (2010, 10 24). 신흥국 IMF 지분 확대-통화 절상 '빅딜'로 타협 끌어내.

Retrieved from 한국일보: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010/e2010102417233370070.htm>

#### 4.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중국에 미친 영향

중국이 위안화의 국제화, 다자개발은행의 설립 등 자국 주도의 국제금융질서를 구상하게 된 배경에는 금융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이뤄진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도 일조하였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무역 흑자가 이어지면서 환율과 국내 물가의 안정화를 위해 채권을 발행하여 시중의 자금을 흡수하였다. 이렇게 회수된 자금으로 미국 국채를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2014년에는 외환보유고가 4조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미국이 3차에 걸쳐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의 외환보유고 평가액이 좌우되는 문제가 있었다. 게다가 중국 국채의 금리(3%)와 미국 국채 금리(0.5%)의 차이로 인하여 지속적인 역(逆)마진 현상까지 일어났다. 미국 국채를 시장에 일거 매도했을 경우에는 채권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까지 감수해야 하였으며, 미국의 부채 상환 부담으로 인하여 경제 하방이 일어날 경우에는 중국의 수출 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중국의 통화정책이 미국에 예측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4조 달러에 달하는 외환 보유고의 분산 배치와 함께 장기적으로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 IV.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정치경제적 함의

#### 1. ‘실�크로드 경제지대’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위와 같은 정책적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시진핑 주석은 2013년 9월 중앙아시아 순방 과정에서 ‘실�크로드 경제지대’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라는 양대 개념을 골자로 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을 발표하였다.<sup>33)</sup> 이 중 ‘실�크로드 경제지대’는 낙후된 중국 중서부지역의 인프라 개발을 통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을 도모하는 내적인 경제정책과 대외적인 경제정책의 연결, 즉 내치(內治)와 외치(外治)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개념이다. 또한 해로(海路)를 기반으로 한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통하여 중국의 남부지방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은 중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 미성숙하다는 판단을 기반으로 구상되었다.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외교적 우호국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중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중국 주도로 도로 및 철도망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 중국의 철도, 도로, 건물, 교량 등 사회 인프라 건설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정책은 다양한 측면에서 성공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는 10여 년 간 이어질 중국 공산당의 안정적인 통치력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의 가장 큰 장점이다. 게다가 중국은 과거 미국 중심의 질서에 도전했거나 도전했다고 평가받는 소련, 독일, 그리고 일본 등의 국가들과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소련은 군사 대국이었지만 경제 구조의 불균형과 함께 성장 정도가 낙후되어 있었다. 무역수지 흑자를 기반으로 미국의 경제적 패권을 위협했던 독일과 일본은 미국에 군사력을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독일과 일본이 군사 비용에 대한 지출을 절감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은 존재하였지만,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 안보는 결국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33) 중국 정부의 정책 실천 방향으로 정책적 소통과 도로 및 항만 인프라 개선, 역내 국가들간의 교역 강화, 위안화의 국제적 유통 확대와 국민들의 이해 증진 등의 노선을 취할 것으로 중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데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에 도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지나치게 경제 성장에 치중하면서 주변국 외교에 소홀히 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달리 중국은 상하이 협력기구와 같은 독자적인 지역 내 안보 공동체를 확립하고, 이를 경제 협의체로 발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게다가 일대일로 구상을 통한 인프라 건설은 장기적으로 경제 협력체의 기능에 덧붙여 역내 인프라의 연결망을 통한 군사 및 안보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기에 중국의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과 정치경제적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 2. 위안화의 국제화와 다자개발은행의 설립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은 전술된 바와 같이 단순한 정치외교적 구호를 넘어 많은 경제적 이권이 달린 사업이다. 사업 추진의 배경은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질서에서 갖는 경쟁력이 낮고, 막대한 외환보유고의 분산배치를 통한 외교자원화(化)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점진적으로 금융 기법을 선진화시키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무역 결제수단으로서 위안화의 사용을 점차 확대하고, 위안화 표시 채권과 덤섬본드와 같은 금융상품을 개방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최근에는 역외 위안화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그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금융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위안화의 국제화와 더불어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 주도의 다자개발은행 설립이다. ADB는 아시아 지역 내에서 2020년까지 약 8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및 3천억 달러의 지역간 인프라 건설이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 개발 시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이권을 획득함과 동시에 중국이 신흥국과 개도국을 중심으로 주변국 금융외교에 나서는 것은 중국이 주도하는 체제를 새롭게 출범시켜 아시아 공동체의 중추적 역할을 맡겠다는 외교 노선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달러화의 위상 하락과 금융 불안 문제를 안고 있는 신흥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금융 외교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지역 내 안보 공동체였던 상하이 협력 기구(SCO)를 경제 협의체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국이 SCO개발은행의 설립을 발표한 것은 금융외교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역내 국가들이 금융 불안을 해결하여 국제금융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상하이 협력기구 회원국들의 낙후된 인프라 개선을 위한 금융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역내 교역 확대를 목표로 설립 준비 중이다. 총 100억 달러의 설립 자본금 중에서 중국의 80억 달러를 출자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중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sup>34)</sup>

SCO개발은행과 더불어 AIIB 또한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의 핵심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아시아 인프라투자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ADB에 대응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큰 ADB에 대응하여 중국 중심의 지역 질서를 형성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2015년 말에 정식으로 출범하는 AIIB 또한 SCO개발은행과 마찬가지로 초기 자본금 500억 달러 중 대부분을 중국이 투자하였으며, 향후 각국의 투자를 통하여 1000억 달러의 자본금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중국 정부는 발표하였다.

34) 동아시아경제외교과. (2013, 10). *중국의 최근 활발한 ‘금융외교’ 동향*. Retrieved from 외교부 : [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24&boardid=11661&tableName=TYPE\\_KORBOARD&seqno=7524](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24&boardid=11661&tableName=TYPE_KORBOARD&seqno=7524)

## V. 한국의 대응전략

### 1. AIIB의 지배구조 문제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존의 국제금융질서에 반발하며 자국 주도의 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AIIB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중국이 주장하는 협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제체제의 건설보다는 금융 패권국으로서의 중국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일본의 AIIB 참여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인데다가 가입국의 GDP 규모에 따라 출자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중국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최근 한국 정부에 AIIB 가입을 요청하면서 한국이 AIIB의 2대 주주로서 전체 자본금의 5~7%에 해당하는 5억~7억 달러의 자본금을 부담하고 투자 관련 결정권이 없는 '비상임의사' 자격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다.<sup>35)</sup> 미국과 일본의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인프라 투자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권력이 모두 중국에 귀속된다면 자칫 한국이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에서도 주변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지배구조 문제의 해결을 조건으로 가입을 유보한 상태이다.

### 2. AIIB/ADB 지분 확대 문제와 AIIB 본부의 유치

하지만 AIIB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큰 경제적 효과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ADB의 경우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의 선진국이 참여하고 있는 반면에 AIIB는 중국을 제외한 회원국이 주로 개발도상국이거나 저개발국가로서 한국이 인프라 개발사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AIIB의 가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통일 시대에 대비하여 박근혜 정부의 드레스덴 연설에서 드러난 동북아개발은행의 구상과 AIIB 가입의 접점을 모색해보는 것도 한 방안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지배구조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최대한 많은 지분을 확보하여 가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의 반응이다. 미국은 한국의 AIIB 가입을 반대하고 있는데, AIIB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ADB에서의 지분을 확대하는 협의에 도달하거나, 혹은 미국의 동의를 구하여 ADB와 AIIB 양측 모두에 동시 가입하는 것도 한 방안일 수 있다.<sup>36)</sup>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이나 일본, 혹은 유럽 국가를 역외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지만, 중국 측의 반응을 고려하였을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 4월 한국 정부가 요청한 AIIB 본부를 인천 송도, 혹은 서울로 유치하는 방안은 대외적인 명분을 획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sup>37)</sup> 중국은 자국 중심의 운영을 원하기 때문에 AIIB 본부를 베이징에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의 AIIB 본부 유치는 국제기구로서 AIIB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는 상당히 설득력있는 명분을 내걸고 있다. ADB 자본금의 2/3에 해당하는 국제금융기구를 유치할 경우, 한국이 국제금융질서에서 갖는 대외적 위상 또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5) 김준일 문병기. (2014, 7 14). *中, 견제장치 없애 亞금융질서 재편 속셈*. Retrieved from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40714/65149856/1>

36)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은 ADB와 AIIB에 모두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37) 박진석. (2014, 7 15). *중국에 AIIB 본부 유치 요청 ... 한국의 묘수*. Retrieved from 중앙일보: [http://mnews.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ctg=mobile\\_A1&total\\_id=15258046](http://mnews.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ctg=mobile_A1&total_id=15258046)

## VI. 맺음말

개혁개방과 2001년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을 통해 중국은 한국에 신흥 경제동맹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거둬들인 경제위기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외교·안보동맹으로서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구(舊)질서와 신(新)체제의 등장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전략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은 자칫 양자 간의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한중동맹을 지지하며, 한중동맹과 한미동맹이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고 발표하지만, 이 또한 한국의 주체적인 외교 노선이 확고하게 존재할 때 가능한 이야기일 것이다.

게다가 문제의 본질은 한국이 단순히 중국과 미국, 양국 사이에서 한 진영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 있지 않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국제적인 자유무역질서를 통하여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국제금융체제에서는 경제규모에 합당한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고 주변국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성립된 브레튼 우즈 체제로 거슬러 올라가, 자본주의 진영의 승전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제금융체제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서 그 문제점과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미국이 전 세계의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9.31%이고, 중국은 15.40%를 차지하고 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국내적인 문제로 인하여 그에 걸맞은 경제적 성장을 오랜 기간 이뤄내지 못했던 중국이 경제 규모 면에서 미국에 거의 근접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 중국과 대등한 경제규모를 갖춘 국가가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 그리고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려 한다는 것은 분명 기존의 주변국들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AIIB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관철하거나 ADB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혹은 두 가지 모두를 달성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구(舊)질서, 그리고 중국과 그 우호국들로 이루어진 신(新)체제의 등장 사이에서 선택적 균형(arbitrary balancing act)<sup>38)</sup>에 기반한 등거리 외교를 통해 협상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양 체제가 한국에 제공할 수 있는 유인책을 반대 진영에 대한 협상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협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가능한 것은 역설적으로 한국이 양 진영으로부터 정치적 압력을 모두 받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국제관리체제(global governance)의 전환기에서 대외 경제·금융정책 및 외교 노선에서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정치·경제·안보 분야에서의 선택지와<sup>4)</sup> 대안을 역사적 배경과 국제질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외교·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38) 이는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 동맹관계와 정상관계의 선택적 균형(문흥호, 2014)’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전략적인 우호와 소원 사이에서 상황에 따라 외교전략을 임의로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참고문헌

- Peng, (2014). *Global Business 3e* (p. 215). Mason: Cengage Learning.
- Coggan, P. (2012). *Paper Promises*. Public Affairs.
- DevelopmentCommitteeMeeting. (2010). *World Bank Group Voice Reform*.
- IMF Member's Quotas and Voting Power, and IMF Board of Governors*. (2014, 12 7). Retrieved from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ttp://www.imf.org/external/np/sec/memdir/members.aspx>
- Katasonov, V. (2014, 5 29). *The Soviet Union could become a "co-founder" of the Bretton Woods system*. Retrieved from RU facts:  
<http://ru-facts.com/news/view/35814.html>
- Lundestad, G. (2012). *"When Will China Overtake the United States in Great Power Terms?"*. Bologna: Johns Hopkins University.
- Money Matters: An IMF Exhibit -- The Importance of Global Cooperation*. (2014, 11 29). Retrieved from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https://www.imf.org/external/np/exr/center/mm/eng/mm\\_dr\\_01.htm](https://www.imf.org/external/np/exr/center/mm/eng/mm_dr_01.htm)
- Weiss, M. A. (201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김준일 문병기. (2014, 7 14). *中, 견제장치 없애 亞금융질서 재편 속셈*. Retrieved from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40714/65149856/1>
- 김현수 이상훈. (2010, 10 24). *신흥국 IMF 지분 확대-통화 절상 '빅딜'로 타협 끌어내*. Retrieved from 한국일보: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010/e2010102417233370070.htm>
- 대외경제국. (2010년). *신흥국 시장 부상에 따른 경제적 평가 및 시사점*. 기획재정부.
- 동아시아경제외교과. (2013, 10). *중국의 최근 활발한 '금융외교' 동향*. Retrieved from 외교부 :  
[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24&boardid=11661&tableName=TYPE\\_KORBOARD&seqno=7524](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24&boardid=11661&tableName=TYPE_KORBOARD&seqno=7524)
- 문흥호. (2014).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 동맹관계와 정상관계의 선택적 균형*. *중소연구* (p. 15~37).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박진석. (2014, 7 15). *중국에 AIIB 본부 유치 요청 ... 한국의 묘수*. Retrieved from 중앙일보:  
[http://mnews.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ctg=mobile\\_A1&total\\_id=15258046](http://mnews.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ctg=mobile_A1&total_id=15258046)
- 서정명. (2014, 7 4). *중국 주도 AIIB 가입, 한국 깊어진 딜레마*. Retrieved from 서울경제: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407/e2014070423293993130.htm>
- 석진환. (2014, 11 10). *박 대통령 "FTA 타결 큰 성과"...시진핑, AIIB에 한국 참여 요청*. Retrieved from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663870.html>
- 이영기. (2013). *국제금융제도 변천과 한국의 대응*. 동국대학교.
- 이윤석. (2009). *금융위기에 대한 신흥국의 반응비교와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 이태규. (2014, 7 8). *백악관 보좌관 "한국 AIIB 가입 신중해야"*. Retrieved from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71fd76222446465ab1b2732c4eed79fd>

인교준 홍제성. (2010, 9 27). *우뚝 선 중국..東亞 판도변화*. Retrieved from 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0/09/27/0301000000AKR20100927096600083.HTML>

주명건. (2014, 4). *붕괴된 브레턴우즈체제와 그 개혁방안*. Retrieved from 월간조선: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B&nNewsNumb=201404100059>